



5면

완주-전주 잇는 옛 만경강 철교 보행로 설치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음 3월 10일)

제3717호

대표전화 (063)288-9700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현재,尹 탄핵 인용 결정

“국민들의 신임 배반
헌법 질서 훼손 심각”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6월 3일 조기대선 유력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현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 중 탄핵 소추 후 가장 긴 기간인 1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현재 소속 8명 구성원 전원은 11시 22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11시 22분)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현재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8시 이전에 출근해 아침까지도 평의를 통해 작은 오류 하나라도 발행하지 않도록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재판관 8명 전원의 의견을 종합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손했기에 윤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으며,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

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대령 체제가 후임 대통령 선출 시까지 이어진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에서는 법에 정한 대통령 선거 일정과 절차를 준수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서는 4일부터 대통령 선

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 직후 서울 광화문과 한남동 등지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환호와 반대하는 지지자의 탄식

이 뒤섞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는 현재의 탄핵 선고 결과 ‘파면’을 발표하자 망연자실하고 탄핵 찬성 지지자는 환호와 함께 합성을 지르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이번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국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후 탄핵 정국의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향후 정치 지형의 변화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원수 탄핵을 무겁게 생각하고 대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 파면 후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은 “어느 한쪽이 아닌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정치권 분열 행위를 중단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윤석열 파면 결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탄핵 인용 결정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현재의 탄핵 인용 직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봄을 응원한다고 지난 12월 3일 계엄 발표 이후 많은 도민이 윤석열 탄핵을 목 놓아 외치며 시민 항쟁의 대열에 함께해주신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현재,尹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수긍

비상계엄 선포·계엄 포고령 등… “위헌·위법성 중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쟁점에 대해 각각 판단을 밝혔다.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가긴급권을 남용

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계엄 선포는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봤다.

두 번째 쟁점인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을 두고는 “계엄 해제 요구권

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라며 “헌법 제77조5항(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 발령에 대해 현재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

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현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며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이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쟁점인 정치인·법조인 위

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현재는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중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5가지 쟁점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모두 위헌·위법 행위로 인정한 현재는 그를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뉴스스



전주매일 캠페인